



55 2013 Autumn

**특집** 아시아의 민족주의와 민족문제

\*

- 04 • 근대 한국의 대외 민족 관계에 대한 과정적 접근 / 김현숙
- 32 • 중국의 중화민족 만들기와 대내외적 갈등 / 서정경
- 52 • 민족문제에 대한 일본의 대응과 일본 민족주의 / 이연옥
- 75 • 식민지배와 필리핀 민족의 형성 / 이해진
- 99 • 베트남의 민족주의의 형성과 전개 / 장임숙
- 118 • 인도네시아의 민족문제에 관한 연구 / 지종화, 이재식

**논단**

- 148 • 다문화 가족 한국인 남편의 결혼생활 커미트먼트와 가족관계 지속의사의 관계 / 정영조, 박지선, 윤정수, 김정숙, 나카지마 카즈오
- 163 • 민족과 불평등 : 중국 신장의 위구르족 / 이양호

Articles

A Study on the relations of outside in modern Korea .....	04
Hyun Suk Kim (Pusan National University)	
China's making of 'Chinese nation' and its internal & external conflict .....	32
Jeong Kyung Seo (Pusan National University)	
Japanese recognition of Ethnic minorities in Japan and Japanese nationalism .....	52
Yeon Ok Lee (Pusan National University)	
The trace of colonization rule, and formation of the Philippines nation .....	75
Hey jin Lee (Pusan National University)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nationalism in Vietnam .....	99
Im Sook Jang (Pusan National University)	
The Study on the Process of Nation's Formation in Indonesia .....	118
Jong Hwa Ji (Pusan National University), Jae Sik Lee (Pusan National Universit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rriage Commitment of a Multi- Cultural Family's Korean Husband and The Intention to Continue His Family Relations .....	148
Young Jo Chung (Okayama Prefectural University), Ji Sun Park (The RYOBI Research Institute of the Well-Being for the Elderly), Jung Soo Yoon (BAIKA Women's University), Jung Suk Kim (Gyeongsangnam-do Provincial Hall), Kazuo Nakajima (Okayama Prefectural University)	
<i>Ethnie</i> and Inequality: Uyghurs in Xinjiang, China .....	163
Yang Ho Rhee (Korea University)	

특 집

# 아시아의 민족주의와 민족문제



근대 한국의 대외 민족 관계에 대한 과정적 접근 김현숙

중국의 중화민족 만들기와 대내외적 갈등 서정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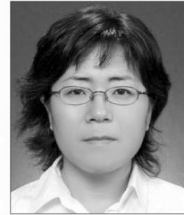
민족문제에 대한 일본의 대응과 일본 민족주의 이연옥

식민지배와 필리핀 민족의 형성 이혜진

베트남의 민족주의의 형성과 전개 장임숙

인도네시아의 민족문제에 관한 연구 지종화, 이재식

# 근대 한국의 대외 민족 관계에 대한 과정적 접근\*



김현숙

(부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illsuk94@daum.net)



## I. 서론

한국이 근대국가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대외 관계는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 사실 한국의 국가성장은 근대국가 형성과정에서부터 외부 민족 세력과의 마찰, 침략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었고, 그리고 협력을 통해 성장,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었다.

19세 중엽 이후 조선은 서양의 출현으로 중국이 아닌 다른 세계를 인식하게 되었고, 또한 이를 계기로 조선의 존재가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다. 자의든 타의든 조선은 공식적으로 하나의

\* 본 논문은 2007년(중점연구소지원사업, 인문사회분야)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0-413-B00026).



국가로 근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조선이 근대로 나아가는 과정은 험난하였다. 어느 국가든 과거를 극복하기 위한 치열한 고통이 있어 왔다는 것을 감안하면 조선의 근대화를 둘러싼 내부 갈등은 어쩌면 당연하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조선이 근대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그때마다 외부 세력을 불러들였고, 향후 조선의 미래가 외부 세력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음을 예고하였다. 그렇게 새로운 근대를 둘러싸고 갈등하는 과정에서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36년을 보냈다. 식민지에서의 해방이 또 다시 외부의 국제정세에 의해 이루어지고, 민족의 분단으로 나타나면서 한국은 더더욱 대외 관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개된다. 민족전쟁으로 인한 처참함을 극복하는 과정이 이념의 혜택이었다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이다. 대외 종속적 산업화 과정이면서도 한국은 세계적으로 성장하였고 그렇게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다시 대외 관계를 수립해 나가고 있다.

이 연구는 근대 한국의 성장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방편으로 대외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근대 한국의 성장과정에는 근대 한국의 내부사정과 국제정세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음을 감안하여야 한다. 한국은 동북아시아의 끝자락에 위치하여 과거에도 외세의 침략이 잦았고, 근대 냉전시대에는 이념의 경계선으로 항상 긴장감이 감도는 곳이다. 탈냉전시대에 접어들면서 이념의 마지막 축이 되어 버린 한반도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각축을 벌이고 있는 중국과 미국에게 여전히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이다. 이처럼 한반도는 지정학적, 이념적 위치 때문에 외부 세력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밖에 없었고, 또한 이러한 한반도를 둘러싼 복잡한 상황으로 인해 내부 세력 간의 갈등과 대립도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한국의 성장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구한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이 대외 민족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 왔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 대외 민족 관계를 다루어 왔던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II장에서는 구한말 조선에서 민족 관계는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III장에서는 일제 식민지시기에 타 민족 집단의 정복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IV장에서는 하나의 민족이 분단되는 상황과 이후 남북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해 나갔는지를 V장에서는 산업화시대에 대외 민족 관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 II. 구한말 조선의 민족 관계

### 1. 서양의 출현

19세기 후반 일찍이 산업혁명을 거친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은 상품시장과 원료공급지를 확보하기 위해 동아시아 식민지 개척에 나섰다. 18세기 후반에 인도는 영국의 지배하에 들어갔으며, 같은 시기 베트남은 프랑스의 식민지가 되었다. 뒤늦게 동아시아에서 세력을 넓

히려는 미국은 19세기 중엽 일본을 강제 개항시킨 후 19세기 말에는 다시 필리핀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시베리아를 확보한 러시아는 남하 정책의 일환으로 한국을 침략대상으로 삼았다. 한편 중국은 19세기 중엽 아편전쟁으로 영국에 문호를 개방당한 후 뒤이어 영국과 프랑스에 패하여 많은 이권을 이들 국가에 양여하였다. 이와 같이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사이에 서구 제국주의는 아시아의 여러 국가를 강제 개항시키는 방식으로 식민지 개척에 나섰다, 그러한 힘은 조선에도 밀려오고 있었다.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이 조선에 처음 등장한 시기는 15세기 무렵으로 추정되지만, 조선에 가장 먼저 통상을 요구한 것은 영국이다. 영국은 1832년(순조 32)에 상선 로드 암허스트(Lord Amherst)호를 몰고 와 황해도 몽금포 앞바다를 거쳐 충청도 해안에 나타나 조선에 통상을 요구하다 돌아갔다(박천홍, 2010). 이듬해에는 프랑스 군함이 출몰하였는데, 프랑스 군함은 영국과 달리, 표면상으로는 기해사옥(己亥邪獄, 1839년)때 조선정부가 프랑스 신부 3명을 살해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였다. 조선 연안에 출몰하는 서양 선박 수가 해가 지날수록 늘어갔지만, 대부분이 영국이나 프랑스 선박이었다. 그러나 1850년대에 들어서면서 러시아, 미국 선박도 하나 둘 조선 해안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러시아 선박은 영흥만, 송전만을 비롯하여 원산, 두만강 하구 등지를 조사하였고, 조사 도중 영흥부 용성진에서 주민을 살해하여 말썽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미국 선박은 미국인 42명, 일본인 2명을 싣고 1853년(철종 3) 12월 동래부 용당포 앞바다에 표도한 범선으로 추측되고 있다(송병기, 1998). 그 뒤 1855년(철종 6) 5월에는 동해를 향해 중이던 포경선 투 브라더스(Two Brothers) 호를 탈출한 미국인 선원 4명이 강원도에 표도하게 된다. 조선 본토에 상륙한 최초의 미국인들이었으며, 언어가 통하지 않아 이들을 중국으로 호송하게 된다. 이후에도 미국 선박은 계속해서 조선 연안에 출현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중국을 출발하여 본국으로 가던 도중 풍랑을 만나 좌초된 경우였다.

서양 상선의 출몰은 조선에 커다란 위협과 당혹감을 안겨다 주었다(송병기, 1998). 첫째, 조선 연안에 출몰한 서양 선박들은 그 선체나 범죽이 조선 선박의 그것과 완전히 구별되어, 조선 사람들에게는 매우 낯설면서도 위협적이었으며<sup>1)</sup>, 둘째, 이양선을 타고 온 사람들은 조선 사람들과 외모와 말씨가 달라 매우 이상하고 괴기한 야만인처럼 여겼다. 셋째, 당시 조선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을 외이(外夷)라고 부르면서, 이들에게 관대하게 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양인들은 해로 탐험, 연안 측량 등의 목적으로 가축을 약탈하고 총을 쏘아 주민들을 살해하였으며, 공공연히 통상을 요청하여 조선 측을 긴장시켰다. 넷째, 통상을 요구하는 서양측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영국은 조선 문정관들에게 통상을 요청하는 문서와 예물을 국왕에게 바칠 것을, 조약을 체결하여 교역할 것 등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서양 측의 도발과 태도로 인해 조선은 강경한 태도를 취하게 된다. 나이 어린 고

1) 당시 조선 사람들은 이 선박들을 이양선(이상한 모습을 한 배)로 불렀다

종을 대신하여 나랏일을 맡게 된 흥선대원군은 서양의 통상요구를 그의 개혁정치<sup>2)</sup>에 큰 위협으로 인식하였다. 게다가 대원군의 집권 이전부터 국내에 잠입하여 선교활동을 하고 천주교 신자들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어서 서양에 대한 위기의식은 더욱 고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흥선대원군은 통상거부의 쇄국정책을 고수하였고 천주교에 대한 탄압(병인사옥, 1866년)을 단행하게 된다. 하지만 병인사옥 이후 서양 세력의 조선 개국에 대한 요구는 더 거칠게 나타났다(박천홍, 2010). 병인사옥 이후 프랑스의 보복원정이 발생하였으며(병인양요, 1866년), 같은 해 8월 미국 역시 조선과 상거래를 요구하다가 충돌하게 된다(제너럴셔먼호 사건). 미국은 제너럴셔먼호 사건을 계기로 조선에 다시 침략하여 통상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것이 신미양요(1871년)이다. 미국은 조선을 상대로 위협적인 외교적 수단을 통해 조선을 개항시키려 하였으나, 흥선대원군의 강경한 통상수교거부정책과 조선 민중의 저항에 부딪혀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수차례에 걸친 서양의 통상 요구에 흥선대원군은 전국 각지에 척화비(斥和碑)를 세워 쇄국정책을 강화해 나갔다. 하지만 대원군의 쇄국정책은 내부적으로는 개국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세력들에 의해 저항에 부딪치게 된다. 개화론자들은 부국강병을 위해 개화사상을 도입하고 문호를 개방하여 대외통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개국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양극으로 치닫는 사이<sup>3)</sup> 일본은 측량을 빙자하여 군함 운요호(雲揚號) 사건<sup>4)</sup>을 일으키고, 이를 계기로 개항을 강요하게 된다<sup>5)</sup>. 이에 조선은 국제관계에 따라 일본과 수호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것이 강화도 조약(1876년)이다. 강화도 조약으로 일본은 조선에서 조차지를 확보하고, 또한 이 지역에 치외법권을 설정하여 일본인 상인들의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 조선의 사법권이 미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일본과의 통상조약으로 조선은 서양의 여러 나라와 통상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첫 대상국은 미국이었다. 일본이 조선과 조약을 체결하고 문호를 개방하자 미국은 조선에 대해 다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또한 일본을 견제하려는 청나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1882년(고종 19년) 5월 22일 조선은 청나라 이홍장의 주선으로 미국과 통상 조약을 체결하게 된다. 조미수호조약<sup>6)</sup>은 서양과 맺은 최초의 조약이나, 강화도 조약과 마찬가지로 치외법권이 인정된 불평등 조약이었다. 하지만 주권 독립국가간의 최초의 쌍무적 조약으로, 조

2) 흥선대원군은 집권하면서 전통질서를 재정비하고 조선왕조의 집권체제를 강화하려 하였다.

3) 그 무렵 조선 조정 내의 권력투쟁으로 대원군이 하야(下野)하게 된다.

4) 일본정부는 운요호를 조선 근해에 파견하여 동해안 일대의 해로측량과 아울러 함포 시위를 벌였고, 또한 운요호를 강화도 앞바다에 재차 출동시켜 초지진의 수비병들이 발포하는 사태를 유발하게 되었다.

5) 당시 일본에서는 정한론(征韓論)이 대두되고 있었다.

6) 전문 14조로 된 조약의 주요 내용을 보면, “조선이 제3국으로부터 부당한 침략을 받을 경우 조약국인 미국은 즉각 이에 개입, 거중조정(居中調停)을 행사함으로써 조선의 안보를 보장한다. 미국은 조선을 독립국의 한 개체로 인정하고 공사급 외교관을 상호 교환한다. 치외법권은 잠정적이다. 관세지주권을 존중한다. 조미 양국 국민은 상대방에서의 상업 활동 및 토지의 구입, 입차(賃借)의 자유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영토권을 인정한다. 조미 양국 간에 문화 학술의 교류를 최대한 보장한다.” 등이다.

선은 이 조약 체결로 수백 년간 유지해 왔던 조·중 간의 종속 관계를 청산, 자주독립국가의 일원으로 국제사회에서 주권국가로 인정받게 되었다. 조미수호조약의 체결을 시작으로 조선은 1883년에는 조영수호통상조약(조선국-대브리튼제국), 조독수호통상조약(조선국-도이칠란트 제국)을, 1884년에는 조로수호통상조약(조선국-러시아제국), 조이수호통상조약(조선국-이탈리아 왕국), 1886년에는 조불수호통상조약(조선국-프랑스 공화국), 1892년에는 조오수호통상조약(조선국-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1902년에는 한정수호통상조약(대한제국-덴마크 왕국)을 맺게 된다.

이와 같이 19세기 말에 이르러 조선은 서양으로부터 강압적으로 개국 요청을 받게 되고, 1876년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시작으로 미국, 영국, 독일 등 서양 열강과 잇따른 통상교섭을 맺게 된다. 19세기 이전까지 조선의 대외 관계가 한반도 주변 국가 즉, 중국이나 일본 정도에 머물렀던 상황을 감안한다면, 생김새도 언어도 다른 서양 국가의 통상 요구는 그 자체가 충격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를 조선에 대한 침략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에 구한말 조선은 서양 열강의 침략에 강력하게 저항하게 되고, 이것이 근대 한국의 민족 인식, 그리고 타민족을 인식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 2. 조선의 근대화, 민족 내부의 갈등과 민족 외부의 간섭

조선의 개국이 외세에 의해 강제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조선은 서양과의 통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근대화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고종은 정치, 외교, 군사, 사회, 경제 각 방면에 걸쳐 급격한 근대화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이때 개화파들의 영향력 또한 급증하였다. 하지만 이때부터 1876년 대한제국이 선포되기까지 20여 년 동안 근대화 정책을 둘러싸고 조선에서는 개화파와 위정척사파 사이의 대립이 격화되어 임오군란, 갑신정변, 갑오농민봉기, 청일전쟁, 갑오개혁, 을미사변, 아관파천, 경운궁 환궁 등 격변이 연속되었다(신명호, 2009).

조선이 쇠망해 가는 과정에서의 첫 시련은 임오군란으로 시작되었다. 임오군란은 구식군대에 대한 차별대우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저변에는 장기적으로 누적된 보다 근원적인 원인이 있다. 류재택(2000)은 임오군란이 발생하게 된 배경을 조선시대의 고루한 전제왕권의 모순, 거기에서 오는 세도정치의 폐해, 왕비와 외척이 겹겹이 포진하여 권력을 휘둘러 정치의 올바른 진로를 모색하지 못하고 부정부패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 점, 민비정권의 개화정책 반대, 개화문물에 대한 편애, 위정척화사상의 고조 등으로 꼽고 있다. 즉, 임오군란은 개화시기에 적절한 정책을 펼치지 못했던 정치세력에 대한 불만과 함께 서양 문물의 유입에 따른 저항감의 표출이라 할 수 있다.

임오군란 이후 단행된 내각개편에서 민씨 일파를 위시한 사대파가 정부요직을 독점하고, 청의 간섭이 증대되면서 개화파의 위기의식은 고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884년(고종 21년) 김옥균을 비롯한 급진개화파가 개화사상을 바탕으로 조선의 자주독립과 근대화를

목표로 갑신정변(1884년)을 일으키게 되지만 청군의 무력공격에 패배하고 개화당의 집권은 3일 천하로 끝나 버리게 된다. 이렇게 위로부터의 혁명이 실패한 후 10년 뒤인 1894년 봄 농민이 중심이 된 갑오농민혁명이 일어났지만, 이 역시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민씨 정권이 다시 청나라에 파병을 요청하게 되고, 또한 그것이 발단이 되어 일본도 조선에 군대를 파견하면서 또 다시 외세를 불러들이게 된다. 이로 인해 청일 두 나라 군대가 아산과 인천에 몰려오는 가운데 서울에서 일본공사 오토리(大鳥圭介)는 내정개혁안을 제시하고, 또한 일본군이 궁중에 난입하여, 친청(親淸) 민씨 정권을 타도하고 흥선대원군을 영입하여 신정권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것이 갑오개혁(1894년)이다.

갑오개혁 1차 개혁의 중심목표는 정치제도의 개편으로 중앙정부의 개편과 관료제도에 대한 개혁이 단행되었다. 또한 오랫동안 조선사회의 폐단으로 지목되어 왔던 여러 제도 및 관습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개혁이 단행되었다. 하지만 제1차 개혁에 있어서 군국기무처의 혁신적인 개혁사업은 수구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대원군으로부터 거센 반발을 받았다(조정규, 1999). 더욱이 대원군은 고종과 명성황후를 폐위하는 대신 이준용을 왕위에 앉히려는 음모를 꾸미는 한편, 동학농민군 및 청국군과 협심하여 일본군을 협격, 축출하려는 계획을 비밀리에 추진하였다. 그러나 청일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일본 정부는 흥선대원군을 정계에서 은퇴시킴과 동시에 군국기무처를 폐지하고 그 대신에 갑신정변을 주도한 김홍집을 내세워 김홍집내각을 수립하게 된다(조정규, 1999). 이러한 권력구조의 변화를 배경으로 고종은 청나라와 절연, 국왕의 친정과 법령 준수, 왕비와 종친의 정치 관여 배제, 내정개혁의 실시 등을 골자로 한 <홍범십사조(洪範十四條)>를 반포하였다. 그 뒤 이노우에 공사는 내정개혁의 미명하에 다수의 일본인 고문관들을 기용하여 조선의 보호국화를 기도하였으나, 일본 차관 도입의 지연과 삼국간섭에 따른 조선왕실의 일본을 배격하고 러시아를 끌어들이는 정책 등이 작용하여 실패하였다. 따라서 제2차 개혁도 조선의 내각 대신들이 주동이 되어 독자적인 개혁을 추진해 나가게 된다.

이상과 같이 일본을 비롯하여 서양과의 통상 수교 이후 조선 조정은 근대화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하지만 조선의 근대화를 둘러싸고 조선 조정 내부에서는 개화파와 위정척사파 간의 대립과 갈등이 고조되었다. 결국 근대화를 둘러싼 민족 내부의 갈등은 청나라, 러시아, 일본을 불러들이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 Ⅲ. 식민지 시대의 민족 관계

#### 1. 일본의 조선 침략

19세기 말 서양의 출몰과 함께 조선은 대외적으로 개국하게 되었지만, 일본과의 불평등

한 조약을 시작으로 조선은 차츰 일본의 식민지로 변해 갔다.

청·일 전쟁에서 이긴 일본이 조선에 대해 더욱 노골적으로 침략성을 드러내면서 조선의 조정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또 다른 외세를 불러들이게 된다. 조선 조정을 장악한 민씨 일파가 친일내각을 무너뜨리기 위해 불러들인 외세는 러시아였다. 민씨 일파는 친러파인 이범진·이완용 등을 중심으로 제3차 김홍집내각을 구성하게 되지만 일본은 군 출신인 미우라 고로(三浦梧樓)를 공사로 보내 민비를 시해하게 된다. 이후 일본은 조선 정부가 러시아와 접근하는 것을 차단한 뒤, 친일개화파로 새로 김홍집내각을 구성하고 태양력의 사용, 군제·교육제도 등의 개혁과 함께 단발령을 실시하는 등 을미개혁(1895년)을 단행하게 된다. 그러나 을미사변의 잔인무도한 일본의 행동은 국제적인 여론을 크게 불러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배일 감정을 극도로 자극하여 의병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어 갑오개혁의 마지막 단계인 을미개혁은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이동우, 1995).

1904년 초 일본과 러시아는 만주와 조선에서의 세력 다툼으로 전쟁을 벌이게 되며, 이 과정에서 일본은 ‘한일의정서(1904년)’를 체결하여 조선을 전쟁에 끌어들인다. 한일의정서는 일본이 러·일 전쟁에 대비하여 대한제국의 영토를 자유롭게 사용하고자 한 조치였으며, 장기적으로는 한국을 침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김도훈, 1993). 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국민에게 알려지면서 정부와 외무대신을 비난하고 의정서의 폐지를 주장하는 저항이 빗발치게 되었고, 이에 일본은 추밀원의장인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한·일 친선대사로 파견하여 한·일 친선을 강조하고, 이 과정에서 대한제국은 한·러 간에 체결되었던 모든 조약과 러시아인에 양도하였던 이권 모두를 폐기한다고 선언하게 된다. 사실상 러시아 세력이 한국에서 축출되는 순간이었다. 이로서 한반도에서 러시아 세력을 완전히 몰아낸 일본은 한일의정서를 근거로 조선에서의 군사 활동을 자유롭게 하고 여러 이권을 점유하게 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일본은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미국으로부터 승인받기 위해 가쓰라-테프트 밀약을 체결하고, 제2차 영·일 동맹에서 영국으로부터, 러·일 전쟁 후 포츠머스 조약을 통해 러시아로부터 각각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승인받음으로써 한국 보호국화 계획은 국제적인 승인을 받게 된다. 일본은 곧 보호 조약안을 확정 짓고(1905. 10. 27), 1905년 11월 9일 한국에 온 특명전권 대사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는 고종과 정부각료들을 협박, 을사조약(제2차 한일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 조약에 의하여 대한제국의 외교권은 일본에 박탈당하게 되며, 이와 동시에 영국·미국·청국·독일·벨기에 등의 주한공사들은 공사관을 철수, 본국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듬해인 1906년 2월에는 서울에 통감부가 설치되고, 초대통감으로 이토 히로부미가 취임하게 된다. 통감부는 일본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외교뿐만 아니라 내정까지도 직접 우리 정부에 명령, 집행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이와 같이 19세기 말 복잡한 국제관계 속에서 대한제국은 국권을 잃게 된다.

## 2. 식민 시대와 민족적 저항의 전개

대한제국은 1910년 8월 일본에 강제 합병되었다. 일본은 효율적인 식민지 통치를 위한 탄압, 영구 예측화를 위한 민족 고유성의 말살과 경제적 수탈을 일관적으로 해 나갔다. 그러는 동안 대한제국 내에서도 민족, 민족주의 의식을 싹트기 시작했고, 이러한 민족 의식을 기반으로 다양한 방식의 항일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 1) 1기-무단통치시기(1910-1919년) : 항일운동의 전개

일본은 통치 초기에 입법·사법·행정·군사 등 일체의 권력을 가진 조선총독이 강력한 헌병·경찰력을 배경으로 무단강압정책을 펴게 된다. 정치적인 결사·집회를 금지시키고 한글신문을 폐간시켰으며 관리나 교원까지 제복을 입고 칼을 차게 하였다. 범죄즉결례·조선태형령 등을 공포, 재판을 거치지 않고 헌병경찰이 즉결처분할 수 있게 하여 많은 한국인을 탄압하고 애국지사를 모조리 투옥하였다. 경제적으로는 한국을 식량·원료 공급 및 상품의 독점시장으로 개편하고, 철도·항만·도로·통신 등 기초적 건설 사업을 착수하였다. 토지조사사업을 시행하여 많은 토지들이 일본인과 동양척식회사에 넘어갔으며, 그 결과 한국 농민 대부분이 소작농으로 전락, 기존 사회가 급속히 해체되었다.

이러한 급격한 개혁과 토지 상실로 민족의 원한과 반항심은 더욱 커져 갔고 각처의 애국지사들은 국권회복을 부르짖었다. 국내에서는 사회계몽 운동가들이 국권회복운동을 위해 신민회를 비밀리에 조직하여(1907년 활동하였다<sup>7)</sup>). 하지만 국내에서는 일제의 탄압으로 국권회복활동을 하기 어려웠고, 많은 민족운동가들은 해외로 망명하여 항일운동을 전개하게 된다(유준기, 2003). 1911년부터 권업회를 이끌며 무장 병력을 양성하였던 이상설은 이 동휘 등과 함께 1914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임시 정부를 조직하였다<sup>8)</sup>. 또한 제1차 세계대전의 종결 후 미국 윌슨 대통령이 민족자결주의를 주창하면서, 유학생들 사이에서 독립운동에 대한 분위기가 높아졌고(김기주, 1989), 이어 1919년 2월 8일 동경조선유학생학우회는 독립선언식을 거행하게 된다. 이러한 국외 활동은 다시 국내에도 알려졌고, 곧이어 3·1운동으로 이어졌다. 3·1운동은 처음에는 서울을 비롯해 평양·진남포·안주·의주·선천·원산 등의 주요 도시에서 독립선언서가 배포되어 주로 학생들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지만, 3월 10일을 전후로 전국의 주요 도시들로 확산되고 대다수의 상인, 농민이 참여한 민중운동으로 전개되었다.

이상과 같이 일본이 조선을 본격적으로 통치하게 되면서 국내에서는 이에 맞선 저항 운동이 차츰 나타났다. 식민지시대 독립운동이 일본의 강압적 탄압으로 제대로 된 조직을 갖

7) 1911년 105인 사건(테라우치 마사타케(寺内正毅)총독에 대한 암살미수사건)으로 신민회 조직은 탄압을 받으면서 무너지게 된다.

8) 하지만 이 역시 1914년 8월 제1차 세계 대전의 발발로 러시아 내에서의 항일 활동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 결국 해체되었다.



추는 것조차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맞선 저항 운동은 지역과 계층을 넘어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독립의 당위성과 민족의식이 고취되었다. 하지만 조선의 독립을 이끌 통일된 조직체가 없었기 지역과 계층에 따라 투쟁의 형태와 강도를 다르게 한 채 분산적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조선의 독립을 주도한 민족대표는 독립청원의 방식에 주력하여 타협적인 태도를 벗어나지 못했고 결국 광범위하게 일어난 민중들의 항일투쟁을 이끌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지니지 못했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전체 독립운동을 통일적으로 이끌기 위해 1919년 상하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었으며, 국내에서는 1920년대 전반기에 민중의 투쟁력을 조직화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었다.

## 2) 2기 문화통치시기(1919-1931년) : 통일정부수립운동

3·1 운동으로 위기감을 느낀 일본은 이전의 무단통치 대신 문화통치를 표방, 민족분열정책을 전개하는 한편, 경제적으로는 조선 경제를 완전히 일본 경제에 종속시키려 하였다. 1919년 총독으로 부임한 사이토 마코트(齋藤實)는 일선융화(日鮮融和), 일시동인(一視同仁)이라는 구호 아래 문화정책을 내세우는 정책변화를 선언하였다. 조선총독부 관제를 개편하여 제도상으로는 문관총독의 임명을 허용하였고 헌병경찰제도를 보통경찰제도로 변경하여 그 사무집행권을 도지사에게 넘겨 지방분권적 자치제도를 표방하였다. 표면적으로는 조선인 관리 임용의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관리·교원의 착검과 제복을 폐지하였다. 또한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의 간행을 허가하는 등 약간의 언론자유를 허용하였으나 검열은 더욱 강화하였다. 경제적으로는 수탈체제를 확립시켜 산미증산계획을 수립, 일본 내의 식량문제를 한국에서의 식량착취로 해결하려 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계획은 실패하였으나 미국을 수탈당한 한국인은 굶주림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만주로부터 잡곡을 들여와 충당해야 했기 때문에 많은 농민들은 화전민이나 노동자가 되거나 이주의 길을 떠났다.

식민통치 2기에 접어들면서 일본은 조선의 정치, 경제를 더욱 예측화하였고 국내외 조직 활동도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당시 국내외에서 활동하고 있던 민족 지도자들은 일제의 삼엄한 감시와 상호 연락의 어려움으로 단일 정부를 수립하지 못하고 여러 지역



에서 각각 별개의 임시 정부를 수립하게 된다. 국내에서는 13도 국민대표 명의로 이승만을 집정관 총재로 하고 이동휘를 국무총리로 하는 한성정부가 수립되었으며(1919년 4월 23일), 국외에서는 연해주에서 손병희를 대통령으로 하는 대한국민의회가 조직되었고(1919년 3월 17일), 중국 상하이에서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1919년 4월 13일)(윤대원, 2009). 이와 같이 여러 개의 정부가



국내외에서 수립되자, 민족 지도자들은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독립 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통일정부수립운동을 전개하게 된다. 이에 상하이로 거점으로 1919년 9월 개헌형식으로 통합되어 대한민국 임시정부(1919-1932)가 탄생하게 된다(이현주, 1999).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마련되면서 항일투쟁은 보다 조직적으로 전개되었다. 1920년 6월 4일 간도 지역에서 한국 독립군과 일본군 사이에 최초로 대규모 전투(봉오동 전투)가 벌어졌고, 1920년 10월 21~26일에는 김좌진이 이끄는 북로군정서군과 홍범도가 이끄는 대한독립군 등이 주축이 된 독립군 부대가 만주, 청산리 등지에서 10여 차례에 걸친 전투를 하여 일본군을 대파하게 된다.

국의 항일투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국권회복과 국민계몽을 위한 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졌다. 3·1 운동 다음해인 1920년 평양에서 조만식, 김동원 등이 조선물산장려회를 만들어 국산품 장려, 소비절약, 금연·금주 운동을, 1922년 말 조선청년연합회는 표어현상모집, 지방순회강연단 조직 등의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그리고 1926년 6월 10일에는 3·1운동을 잇는 전국적이고, 전민중적인 6·10 만세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또한 이 무렵 정치·사회 사상을 뛰어 넘은 민족독립이론도 발전하게 된다. 1927년 2월 15일 그동안 비타협적 자유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일본의 식민지 통치에 대항하여, 이념을 초월한 독립운동단체 ‘신간회’를 창립하게 되었고, 신간회는 사회주의와 자유주의를 뛰어 넘어 민족독립이론을 발전시키게 된다(윤덕영, 2011). 신간회가 국내에서 활발한 조직 활동을 벌이고 있을 무렵 1929년 11월 3일 광주에서는 학생들의 대규모 집단 항일 운동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1930년까지 전국 194개 학교 5만 4천 명의 학생이 참가한 3·1 운동 이후 최대의 민족 운동이었다.

이상과 같이 일본의 식민통치가 2기에 접어들면서, 조선의 독립운동가들은 통일적인 독립운동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임시 정부를 만들어 활동하던 독립운동가들은 통일적 독립운동을 위해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하게 되고 이후 이곳을 중심으로 항일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한편 국내에서는 일본의 식민통치에 맞서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갔고, 이념을 초월한 독립운동단체도 조직하게 된다. 결국 일제 식민통치가 2기는 일본 식민통치에 맞서 국내외에서 조직적 활동을 펼친 시기라 할 수 있다.

### 3) 3기 민족말살통치시기(1931-1945년) : 민족주의의 분열

1930년대 일본은 한국을 대륙침략을 위한 병참기지로 삼았다. 1936년 총독으로 부임한 미나미 지로(南次郎)는 군수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전시경제체제의 확립을 시도하였다. 한국경제의 재편성을 단행, 중화학공업을 발전시키는 한편 군수물자 수송을 위한 육운, 해운, 공수의 교통시설과 통신시설을 확충하였다. 이러한 전시동원체제는 내정으로 이어져 조선

사상범예비구금령,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을 공포하고 사상운동 탄압에 들어갔다. 1938년에는 교육령을 개정하여 국제명징(國際明徵), 인고단련(忍苦鍛鍊), 내선일체(內鮮一體)의 3대강령을 내세워 황국신민화를 도모하였다. 조선어과목의 폐지, 조선어학회와 진단학회의 해산, 한글신문의 폐간, 신사참배, 창씨개명의 강요 등 민족문화 말살을 위하여 강력한 정책을 수행하였다. 전시동원에서 일본은 정신적 사상적인 통제에만 그치지 않고 인적, 물적 동원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1937년 육군지원병제로 한국 청년을 침략전쟁의 총알받이로 내보냈으며 근로보국대를 조직, 군사시설과 중공업에 초등학교 학생까지 동원하였다. 1944년에는 한국청년들에 대한 징병제도뿐 아니라 여자정신대근무령을 공포하여 12세부터 20세까지의 한국인 여성 수십만 명을 징집, 일본과 한국 내의 군수공장을 비롯한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전선에 위안부로 파견하였다.

이 무렵 국내 독립운동은 1931년 민족단일당 성격으로 결성된 신간회가 해체됨으로써 자유주의, 사회주의 세력으로 양분 분열되어 진행되었다. 자유주의 세력은 문화계몽운동, 자치운동 등 온건노선에 따른 방향으로 나갔고, 사회주의 세력은 1928년 코민테른 〈12월 테제〉, 1931년 프로핀테른의 〈9월 테제〉, 1931년의 범태평양노동조합 비서부의 〈10월 선언〉 등에 따라 노동자들의 노동쟁의, 농민들의 소작쟁의가 민족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되었고 개별 열사들의 항일투쟁도 지속적으로 이어져 나갔다(도진순, 2001). 또한 기성민족운동과 함께 학생운동도 문화계몽운동, 동맹휴학, 비밀결사 등의 형태로 전개되었다(김호일, 1989). 한편 국외에서는 만주, 시베리아 등지에서 항일투쟁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중국 지린성(吉林省)에서 결성한 조선혁명당(朝鮮革命黨)은 조선혁명군을 산하에 두고 만주에서의 항일 무장독립운동 및 반일 민족자치운동을 벌였다.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중국 각지에 흩어져 독립운동을 하던 애국단체들을 모아 한국광복군을 창설하고,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자 1941년 12월 9일 대일선전(對日宣戰)을 정식으로 포고하고, 이에 따라 연합군의 일원으로 참전하였다.

이상과 같이 일본은 식민통치 말기에 이르러 전시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민족말살정책을 단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내외에서는 한편으로 일제의 민족말살정책에 맞서 민족문화 수호운동을 전개하고, 다른 한편으로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해 나갔다. 그러나 국내에서 민족문화수호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갔던 신간회가 일제의 탄압에 의해 해체되자 국내의 독립운동세력은 다시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계열로 양분되어 버렸다. 자유주의 계열의 우파 민족주의는 문화계몽운동, 자치운동 등 온건한 방향에서, 사회주의 계열의 좌파 민족주의는 노동자, 농민 쟁의 등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국내에서의 좌우의 대립 속에서 조선은 해방을 맞이하게 된다.

## Ⅵ. 분단시대의 민족 관계

### 1. 해방과 민족의 분열

일본은 1941년 미국을 공격하여 태평양전쟁을 일으켰지만, 1945년 8월 15일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였다. 한국은 광복을 되찾았고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된 한국인은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하지만 8·15 광복은 이전의 하나 된 민족으로 복원시키지는 못했다. 1946년 8월 15일 해방 1주년 기념식은 좌익과 우익으로 갈려져 치러졌으며, 이후 건국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도 남북한 간의 대립, 남북한 내부에서 좌우대립 또는 친일파 대 독립운동세력의 대립 그리고 국외에서는 미소 간의 냉전적 대립 구도가 매우 복잡하게 전개되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 패망으로 독립을 맞이하면서 곧바로 여운형을 중심으로 한 건국준비위원회(이하 건준위)가 꾸러지게 되었다. 건준위는 남한에서는 여운형과 안재홍이, 북한에서는 조만식을 중심으로 하여 진행되었고, 8월 말까지 민중들의 지지와 호응에 부응하여 전국적으로 140여개의 지부가 확장되어 설립되었다. 하지만 해방 후 자주적으로 독립 국가를 건설하려던 국내의 움직임은 내부의 분열로 오래가지 못했다. 김성수, 송진우 등과 같은 국내의 우익세력들은 ‘중경 임정(臨政) 지지’를 선언하면서 건준위에 불참하게 된다. 이후 건준위는 우파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박헌영의 공산당계열이 주도하게 되고, 이로써 건준위는 조선인민공화국(이하 인공)으로 개편되었고, 9월 7일 건준위는 해소되었다(박인규, 1989).

하지만 곧이어 9월에 미군과 소련군이 한반도에 입성하면서 남북한 각각은 미국과 소련에 의한 직접통치를 받게 되었다. 남한의 경우 미군정은 ‘맥아더 포고령 1호’에 따라 국내에서 치안, 행정 업무를 담당했던 ‘건준’과 ‘인공’ 뿐만 아니라 심지어 ‘중경 대한민국 임시정부’까지 불인정하였다(윤대엽, 2010). 결국 해방 후 정치적 혼란은 남북에 또 다른 외세를 불러들이게 된 것이다. 남북 각각에 미국, 소련이 38도선을 경계선으로 한반도를 분할점령하고 군정을 실시하는 가운데, 한반도의 신탁통치안이 구체화된다. 이에 좌익세력에서 박헌영은 소련과의 협의 끝에 모스크바 결정을 지지하는 태도를 취하였고, 반면 우익진영에서는 김구, 이승만 등은 1945년 12월부터 신탁통치반대운동을 전개하게 된다. 임정 등 반탁세력들은 한반도 신탁통치가 민족자결의 원칙에 어긋나며, 이미 1919년 독립선언을 했으며, 또한 해방 후 충분히 건국할 역량을 갖추었다는 것을 이유로 신탁통치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한편 이 과정에서 좌우합작운동(左右合作運動)이 일어났다. 좌우합작운동은 1946년 통일 임시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좌파, 우파세력이 합작하여 연대를 추진하였던 운동으로, 여

운형의 조선인민당이 주축이 되어 전개되었다(정병준, 1993). 좌우합작위원회는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정이 한국문제를 해결할 국제사회의 유일한 합의임을 인식하고 이를 한국문제의 해법으로 수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합의는 중경 임시정부세력들과 한민당 보수파들이 반발로 하루도 못 가 휴지조각이 되어버렸다.

이와 같은 신탁통치 찬반 논란은 국내 정치에서 우익 세력들을 남조선대한국민대표민주의원으로, 좌익 세력을 민주주의민족전선으로 결집시켰다. 그리고 국제 정치적으로는 소련과 협상을 통한 한국 문제의 해결이라는 미국의 의지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즉, 해방 후 신탁통치 논쟁은 이념적 대립으로 나타나고, 다시 정치세력들 간의 정치투쟁으로 나타나 국가건설의 중심세력이 분열되는 분수령이 되었다. 결국 신탁통치 논쟁 이전에는 남한의 정치구도가 민족 대 반민족의 구도로 갈등이 일어났다면, 반탁여론이 반소·반공여론으로 변질되면서 사회적으로 좌·우 분열이 더욱 심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 2. 하나의 민족, 두 개의 국가

남과 북을 각각 점령한 미군정과 소군정의 영향으로 남북은 서로 다른 식민지 청산과 건국 과제를 안게 되었다. 우선 해방 직후 남북 모두 친일과 숙청을 건국의 우선 과제로 여겼지만, 친일과 숙청 문제는 미국과 소련의 대일 관계 속에서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된다. 남한의 미군정이 친미반공국가를 수립하는데 친일파를 활용하는 정책을 취했다면, 북한의 소군정은 친소국가를 수립하기 위해 일제 잔재 청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남한의 경우 해방 직후 친일파 논의는 신탁 논쟁을 기점으로 크게 흔들리게 되는데, 미국=즉시독립주장=우익=애국이고, 소련=신탁통치주장=좌익=매국이라는 이념적 도식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후 친일 행위로 애국과 매국을 구분하던 상황이 반탁운동, 반공운동 여부로 애국과 매국을 구분하는 사상의 혼란상태가 시작된 것이다(이강수, 2003). 반면 북한의 경우 소군정의 친일파 배제 정책, 사회주의적 개혁 과정에서 친일파 숙청에 대한 논의는 남한에 비해 논란이 적었다(이강수, 2003). 북한에서는 친일파뿐만 아니라 조만식 등 민족주의자들을 배제하고, 토지개혁을 통한 지주층의 배제와 이탈, 그리고 친일파 처단으로 구지배세력의 몰락이 일사분란하게 진행되었다(박경림, 1998).

또한 미소에 의해 남북한이 분할점령되면서 남북은 각기 독자적인 건국이념을 표방하게 되었다. 북한이 사회주의 정권을 표방하였다면, 남한은 자본주의적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하려 하였다. 건국의 과제가 남북한 및 좌우익에 의해 별도로 추진되면서 새롭게 등장한 문제가 통일이다. 우선 1946년 1차 미소공위에서 소련이 통일임시정부 수립 문제를 우선적으로 제기한데 반하여 미국은 38선 철폐를 통한 국토의 개방이라는 단일 행정단위구성을 우선시하였다. 남북한 내부에서 통일 논의는 좌우합작운동에서 진행되었는데, 1946년 7월 25일 좌파 계열의 민주주의민족전선은 ‘남북통일의 민주주의 임시정부수립’을 좌

우합작의 제일원칙으로 내세웠고 7월 29일 우익도 남북을 통한 좌우합작으로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에 노력할 것을 첫 조항으로 제시하였다.

남북한의 모든 정치세력들이 통일을 강조하였지만 통일에 대한 방식은 서로 달랐다. 크게 보면 정치적 이념을 내세운 패권주의적 논리와 민족주의적 논리로 나누어진다. 패권주의적 논리는 남북한 주도 세력의 전형적 입장이었다. 남한의 경우 이승만과 한민당을 중심으로 한 우파 진영에서는 통일 방안으로서 탁치반대론을 내세우면서 좌파세력을 비난하는데 주력했다. 반면 북한에서는 분단의 모든 책임을 미제국주의와 그 괴뢰인 우파 정치세력들에게 돌리는 관점이다. 이에 비해 김구, 김규식으로 대표되는 민족주의적 논리에서는 남북한의 어느 한쪽에 치중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웠다. 이와 같이 48년 통일담론은 도무지 서로 합치할 수 없는 대립과 배제의 논리가 작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통일론은 본질상 분단 상황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근거였고, 남북한의 통합을 지향해야 한다는 당위론의 모태였으며, 그 핵심에는 단일민족으로서의 민족적 정체성이 자리 잡고 있었다(박명규, 2000).

남한이 총선거를 통해 제헌국회를 구성하고(1948년 5월 31일) 국가수립을 공포하자(1948년 8월 15일) 북한도 뒤이어 독립정부를 수립함으로써(1948년 9월 9일) 한반도 내에 두개의 국가가 출현하게 된다. 하지만 남북 모두 분단정부를 일시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통일을 최고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남한에서 이승만은 '북진통일론'을 주창하였는데, 이는 북한을 되찾는다는 실질회복론이고 공산당에게 억압당하는 북한동포를 해방하자는 주장이기도 했다. 이러한 사고는 군사주의적 사고를 불러일으키는데, 이는 미국을 중심으로 확산되던 냉전적 사고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반면 북한의 경우 민주기치론에 입각한 통일론을 견지하고 있었는데, 김일성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는 오랫동안 무력투쟁노선을 견지해왔다. 정부가 구성된 이후에야 군대를 조직했던 남한에 비해 북한은 일찍부터 인민군을 조직하였고 이 군대를 통해 사회주의 혁명을 실천해 나갔다. 1949년 중국혁명이 성공하고, 내부적으로 사회주의적 변혁을 어느 정도 완료하고 체제내의 동원체제가 자리 잡게 되자 북한은 남한에 대한 공세적인 '통일운동'을 생각해 내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50년 1월 12일 아티슨 미국무장관은 내셔널 프레스클럽의 연설에서 미국의 서태평양의 방위선으로 알류산 열도,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을 연결하는 '불후퇴 방위선'을 발표하게 된다. 이에 북한은 이것을 민족해방전쟁의 호기로 받아들였고, 1950년 6월 25일 북한은 남한을 기습 공격하게 된다.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는 즉시 북한의 무력공격을 '평화의 파괴'로 보았고, 6월 27일에 다시 소련 부채 하에 국제연합 가입국에게 북한의 무력공격에 대하여 한국에 원조를 제공하도록 권고한다. 전세는 1950년 9월 국제연합군의 인천상륙작전으로 일단 국제연합군 우위로 기울었지만, 그 다음 달 한국군과 국제연합군이 38도선을 돌파하여 북상한 것이 중국인민군의 참전을 초래하게 된다. 결국 민족

해방전선으로서 시작된 한국전쟁은 미·중 대결의 양상을 띠게 되었다. 하지만 곧이어 전쟁이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면서 1951년 6월 마르크 소련 국제연합 대표의 제의로 정전협상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승만에게 한국전쟁은 국제연합군의 힘을 빌린 ‘북진통일’이기 때문에 정전에 반대하게 된다. 결국 정전협상은 한국군이 빠진 상태에서 진행되어 1953년 7월 27일 조선인민군, 중국인민지원군, 국제연합군의 3자에 의해 군사정전협정이 서명되어 3년 이상에 걸친 전투상태가 정지되었다.

이상과 같이 해방 후 남북한 각각은 미군정과 소군정의 영향 속에서 서로 다른 체제를 수립하였다. 하지만 두 체제 모두 분단 상황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각각의 이념 속에서 패권적 민족 통일을 이루고자 하였다. 이러한 패권적 민족주의는 결국 한반도를 전쟁으로 몰고 갔다.

### 3. 분단 후 남북관계

분단 후 남북은 서로 다른 길을 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모두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선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여전히 하나의 민족이라는 점을 두 체제 모두 인정해 왔으며, 그렇기 때문에 통일은 가장 중요한 정치적 목표이자 과제였다. 하지만 통일에 대한 방식은 남북한 각각이 달랐다. 북한이 1960년 이후 현존 체제를 인정하는 연방제(聯邦制) 통일을 주장한 반면, 남한은 1국가 1체제 통일을 주장한다.

통일에 대한 입장 차이가 분명해지면서 남북은 한동안 냉전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하지만 극단으로 치달던 남북관계도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관계 개선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1971년 8월 12일 대한적십자사는 KBS방송을 통하여 북한 조선적십자회에 남북한 이산가족 찾기를 위한 적십자회담 개최를 제의하였고, 이어 북한 측도 이틀 후인 8월 14일 평양방송을 통하여 남북적십자회담 개최에 동의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제1·2차 남북적십자회담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면서, 곧이어 7·4 남북 공동성명(1972년)이 이루어지게 된다(우승지, 2008). 7·4 남북 공동성명은 남북 간의 정치적 대화통로 마련과 한반도 평화정착 정책 추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발표한 남북한 간의 첫 합의 문건으로, 남북 간의 정치적 대화통로를 마련한 이외에도 고위급 정치회담을 통하여 공동성명을 합의 발표함과 동시에 상호 방문을 통하여 쌍방의 당국최고책임자를 만나 남북문제를 허심탄회하게 거론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남북한의 화해무드는 1976년 8월 18일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이 발생하면서 비참히 무너지게 된다. 사건 직후 주한미군과 한국군은 ‘데프콘 3호’(경계상태 돌입)를 발령하고 전투태세를 갖추는 등 강경태세를 보였지만, 북한의 김일성이 유감의 뜻을 표명하는 사과문을 국제연합군 측에 전달함으로써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은 남북이 따로 분할경비하게 된다. 남북 관계가 급속하게 냉전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을 제안하고, 곧이어 전두환 대통령도 1982년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보다 실질적으로 남북관계에 개선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노태우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터이다(우승지, 2008). 1988년 재야단체와 학생층을 중심으로 통일논의가 확산되면서 노태우 정부는 북한·중국·소련에 대한 개방정책을 표명하는 6개항의 대북정책을 발표하게 된다. 여기서 자주·평화·민주·복지의 원칙에 입각하여 민족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사회·문화·경제·정치공동체를 이룩함으로써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갈 것을 천명하고, 6개항의 실천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선언은 한편으로는 북한을 적대적인 경쟁상대로 인식하지 않고 적극적인 대북협력의지를 표명하면서 각종 대북제외에서 항상 수반되었던 전제조건을 달지 않았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되었다. 이후 남북국회회담 및 남북고위급회담을 위한 예비회담 등 남북대화의 촉매제가 되었으며, 사회주의권과의 경제교류 및 수교 등 북방정책을 추진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이후 1990년 7월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이 서울에서 개최되었고, 이후 1992년 10월까지 8차 회담이 성사되었다. 이 중 1991년 12월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는 ‘남북 간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1992년 2월 제6차 회담에서의 ‘비핵화공동선언’과 ‘분과위 구성·운영 합의서’가 채택되었다. 1992년 5월 제7차 회담에서는 군사, 경제교류·협력, 사회문화교류·협력 등 3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남북연락사무소 및 남북화해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데 합의하였다. 1992년 9월 제8차 회담에서는 남북기본합의서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화해, 불가침, 교류·협력 등 3개 분야의 부속합의서가 발표되었다. 그러나 12월 21일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한 제9차 회담은 ‘남한조선노동당 간첩사건’의 발생으로 결국 무산되었다. 1993년 1월 한·미 양국이 팀스피리트 훈련계획을 발표하자 북한은 이를 구실로 남북고위급회담 대표단 성명을 통하여 그 동안의 모든 남북대화를 전면 거부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3년 3월 북한은 NPT(핵 확산 방지 조약) 탈퇴를 선언한다.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위기감이 고조됨에 따라 미국은 북한의 NPT복귀와 IAEA(국제 원자력 기구) 사찰 수용을 요구한 UN 안보리 결의(1993년 5월)에 근거해 1993년 6월부터 북한과 핵 협상을 시작하게 된다. 미국과 북한은 여러 차례의 지루한 협상을 거듭한 결과 1994년 10월 마침내 북한의 핵 활동 동결 및 대북 경수로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기본합의문을 채택하게 된다. 이상과 같이 이제 남북관계에 또 다시 미국이 개입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대북





한 강경정책을 계속하기는 어려워졌다. 따라서 김대중 정부는 북한이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협력과 화해를 적극 추진하는 것을 대북한정책으로 설정하였다(김연철, 2010). 대북한 강경정책에서 햇볕정책으로 바뀐 것이다. 정부는 북한에 대한 투자규모의 제한을 완전히 폐지하고 투자제한 업종의 최소화를 골자로 하는 '경제협력 활성화조치'를 취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으로 남북한은 화해 무드를 조성하게 되었으나, 1999년 서해 북방한계선(NLL: Northern Limit Line)<sup>9)</sup>이 있는 연평도 근해에서 서해교전이 발생하게 된다. 서해교전으로 남북 관계가 다시 긴장되는 상황에서 1999년 8월 10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방북하여 평양선언을 이끌어 낸다. '조일관계의 현 사태와 관련한 3가지 원칙적 입장선명'이라는 평양선언은 북한이 대일 관계개선을 추진하는 목적을 밝히고 있다. 그 목적은 첫째, 일본이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을 포기하고 새로운 정책전환으로 나오게 하고, 둘째, 일본이 조선인민에게 저지른 과거의 모든 죄행에 대하여 사죄하고 보상하게 한다는 두 가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0년 6월 분단 55년 만에 남북한 최고위급회담이 개최되었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6·15 남북공동선언에 합의하고, 다섯 개 항의 합의 내용과 함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적절한 시기에 서울 방문을 명시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6·15공동선언 이후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남북장관급회담, 남북 경제협력추진 위원회의 구성 등이 이루어졌으며, 남북분단으로 단절되었던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을 위한 복원공사가 착수되었다(김연철, 2010).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핵문제에 대한 논의가 재개되었다. 북미 양자회담이 아닌 남북한과 주변 4강(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이 참여하는 다자회담 즉, 북핵 6자회담이 열리게 된다. 남북관계가 주변 강대국의 영향력이 가미된 관계로 변화되는 시기에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계승한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10월 4일 분단 후 처음으로 판문점을 걸어서 평양을 방문,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남북 정상회담을 열고 '남북관계 발전 및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선언)'을 하게 된다.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은 본질적으로 적대적 의존관계를 청산하고 화해적 공존관계를 이루고자 한다는 점에서 통일정책이라기보다는 대북정책이다. 그러나 단순히 평화공존을 지향한다기보다는 북한과의 점진적이고 부분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남북한의 유기적 통합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이는 통합이론의 기초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사실상의 통일을 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남북 화해 무드는 오래가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는 남북한이 보다 상호적인 접근법에 기반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비핵·개방 3000'을 새로운 대북정책으로

9) 북방한계선은 지난 53년 8월30일 유엔군사령관이 우방의 함정 및 항공기 초계활동의 북방한계를 규정, 남북 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선언한 해상경계선으로, 북한은 서해 NLL을 '유엔사가 일방적으로 선언했을 뿐'이라며 공식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지역은 꽃게가 풍부한 어장으로 해마다 6월 즈음이 되면 북한의 어선이 NLL을 침범해 문제가 되어왔다.



선언하게 된다. 즉, 대북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한반도 비핵화’이며, 모든 대북 협력과 지원에 ‘북한이 핵 폐기의 결단을 내리면’이라는 조건을 앞세우고 있다(황지환, 2010). 이는 남한의 북한에 대한 우월적 입장과 자신감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실용주의적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 스스로가 변화의 길을 선택하지 않는 이상 북한을 국제사회에 더욱 고립화시킬 수밖에 없다. 실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는 급속히 냉각되었다. 북한은 개성관광 중단, 남북한 철도 통행 중지 등의 조치를 단행했다. 그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 긴장관계의 수위를 높여 나가고, 2009년 4월 5일 ‘광명호 2호’ 발사, 2009년 5월 제2차 핵실험, 이후 6자회담에서 탈퇴함으로써 남북관계의 경색은 국제적 문제로 부상하게 되었다. 결국 남북관계의 갈등 수위는 10년 이래 최고점에 도달하였으며, 남북관계는 냉전시대의 모습으로 회귀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탄홍메이, 2010).

## IV. 산업화 시대의 민족 관계

### 1. 한·일 관계 : 해소되지 않은 민족 감정과 실리

한국은 일본 식민지 문제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정세는 한일관계를 적대적 관계가 아닌 우호적 관계로 형성하게 하였고, 또한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일본과의 협력은 한국이 성장동력을 갖추는데 매우 중요하였다. 결국 이러한 상황은 한국이 일본과의 관계를 설정하는데 장기적인 비전을 갖추기 어렵게 하였다.

1948년 8월 15일 미군정이 종식되고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하는 제1공화국이 정식 출범하였다. 제1공화국은 국제적으로 반공과 반일을 통해 신생정부의 지지 세력을 확보하려 하였고, 국내적으로 북한과의 대결을 통해 정부의 정통성을 확보하려 하였다(윤진표, 2003). 따라서 이승만 정부에서 대일 관계는 한일청구권회담, 한반도 주변해역에 평화선 선포, 재일교포 복송회담 지지계획 등에서 나타나듯이, 일본에 대해 적대적 감정을 드러냈다. 하지만 이승만 정부는 1945년 10월 환국한 이후 한민당과 손을 잡는 한편, 친일경찰, 친일관료, 친일경제인 등 친일파를 자신의 중요한 정치적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민족 주체성이나 자주성과 거리가 멀다. 이승만 정부가 친일파 기반에서 대일 관계를 감정적으로 풀어 나갔다면, 장면 정부는 보다 실리적인 관점에서 대일관계를 풀어가려 했다. 장면 정부의 초대 외무장관으로 기용된 정일형은 선린호혜 원칙에 입각하여 신의와 상호이해로써 양국의 외교관계를 정상화시키고, 재일교포의 복송 저지문제 등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을 추진하고 필요하면 총리 또는 외무장관의 고위회담을 개최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윤진표, 2003). 즉, 장면 정부는 일본을 포용하고, 한국의 민족주의와 근대화의 입장에서 일본을 이

용하려고 했다(정대성, 2003).

박정희 정부는 초기부터 한일국교정상화에 적극적이었다. 1962년 11월 박정희 의장의 위임을 받은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은 오히라 외상과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민간차관 1억 달러+알파로 대일 청구권 문제를 합의하고,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양해하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1964년 3월 '김·오히라 메모'가 알려지자 야당과 학생세력은 대일 굴욕외교 반대 투쟁위원회를 결성한 후 대규모 시위를 하게 되었고 한일회담 타결은 연기되었다. 그렇지만 1965년 6월 22일 일본의 총리관저에서 '한일기본관계조약'과 부속협정으로 '청구권 및 경제협력 협정', '문화재 및 문화협력 협정', '어업 협정', '재일한국인의 법적 지위 협정' 등 4개 협정에 서명하고, 동년 12월 18일 비준서를 교환함으로써 한국기본조약 및 부속협정이 발효되고, 양국의 대표부와 사무소를 대사관으로 승격하면서 정식 국교를 맺게 된다(서중석, 2010). 박정희 정부는 일본과의 과거 청산의 문제를 너무도 쉽게 해결함으로써 반민족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는 박정희 대통령의 사대주의적 태도에서 나온 것으로, 우리 민족의 역사를 퇴역과 침체의 역사로 규정하면서, 내발적 발전보다는 외향적 발전을 위해 즉 조국의 근대화를 위한 변형된 민족주의의 발로라고 할 수 있다(서중석, 2010).

1979년 10월 박정희 대통령의 사망으로 유신체제가 붕괴된 후 1979년 12·12 사태와 1980년 5월 광주민주항쟁을 진압하면서 전두환 정부가 등장하게 된다. 1980년대 전두환 정부의 대일 관계에서는 정치적으로 제안된 대규모 공공차관 문제, 무역역조 문제, 역사청산 문제와 관련된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 등이 주요 쟁점이었다. 그 중 전두환 정부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었던 외교현안은 한국정부가 일본 정부에 요청한 대규모 공공차관에 관한 것인데, 1983년 1월 나가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총리가 최초로 공식 방한하면서 총액 40억 달러로 타결된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일본에게 한국의 새 정부의 안정을 위해 일정한 역할을 수행해 달라는 압력을 가했으며, 또한 이를 통해 한국은 일본 정부로부터 암묵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는 효과를 얻어 냈다. 전두환 정부의 대일관계를 통해 한국은 한편으로 경제적 종속이 심화되었고, 다른 한편으로 정치적 동맹을 강화해 나아갔다. 노태우 정부의 한일 관계는 전두환 정권에 비해 다소 긴장감이 누그러졌지만, 식민지 지배의 사과와 역사청산의 문제를 다시 제기하고, 일본과 북한 간 국교정상화 문제에 대해서 한국의 입장을 표명하며, 그러면서도 일본과의 무역역조 시정과 산업기술협력문제를 이끌어 냈다.

김영삼 정부는 과거의 군사정권과 궤도를 달리하는 문민정부임을 강조하면서 다원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외교 노력을 전개하였다(서중석, 2010). 한국은 북미 지역에 대신하는 동남아 지역의 수출시장 확대와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일본의 기술이전이 필요하고, 동시에 대일 무역역조의 시정 그리고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한·일 간의 공동보조가 필요했다. 다원주의적 세계질서의 변화에 따라 김영삼 정부는 정신대 문제나 강제징용문제 등의 정치적 문제는 모두 버렸으며, 철저하게 경제적 논리에 대일관계를 구축해 나갔다.

김대중 정부의 대일 정책은 1998년 10월 일본을 방문하여 발표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및 행동계획'을 시작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일본과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실질 경제협력 기반을 확충하는 방향으로의 정책을 전개하였다. 이 과정에서 2000년 들어 일본이 과거사를 크게 왜곡한 중학교 역사교과서를 채택함으로써 김대중 정부와 마찰을 빚게 되지만, 대체로 새로운 한일관계를 가져오는 인식전환과 교류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다. 이전과 달리 역사문제를 한일관계의 카드로 활용하지 않으면서 일본과 협력해 나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정부로 한정되었던 교류도 시민과 NGO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한일관계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진창수, 2002).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 대일관계는 크게 경색되었다. 집권 초기만하더라도 이전 정권과 마찬가지로 일본을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의 동반자로,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미·일 삼국 협력의 한 축을 구성하는 협조대상 국가로서 여겨왔지만(김호섭, 2005). 집권 2년이 흐른 후 대일 관계는 급격하게 경색 되었다. 첫째, 한국의 반일감정을 자극하는 일본 우익들과 지방정부 및 고위정치가의 독도 영토권 주장이나 왜곡된 역사 교과서 채택 등의 망언과 행동들이 있었고, 둘째, 기존 동북아시아 질서 속에서 한국의 역할에 대한 정책 전환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 셋째, 노무현 정부의 자주외교론인데, 한국이 동북아의 중심에 있으며, 더 이상 변방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스스로 나라를 지킬 때가 되었다는 자신감의 피력이었다.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면서 대일 관계는 다시 이전의 경제협력이 중심인 실용주의 외교 정책으로 나갔다. 노무현 정부와는 달리 이명박 정부는 과거사 및 역사인식 문제에 대해 일본에 진일묘한 사죄나 반성을 요구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전 정부의 햇볕정책을 대신하여 북한을 압박하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미·일 공조가 필요했으며, 따라서 기본적으로 한·일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대일 관계를 만들어 나갔다.

## 2. 한·미 관계 : 영원한 우방은 없다

한·미 관계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은 1882년 5월 22일 한·미 수호통상조약<sup>10)</sup>이 체결되면서 부터이지만, 양국 간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일본 패전 후 한반도에 미군이 점령하면서 부터이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연합국에 항복함에 따라 1945년 9월부터 1948년 8월 15일까지 3년간 미군에 의한 한반도 통치가 이루어지게 된다.

미군정기 동안 미군은 일본의 통치기구를 그대로 존속한 채 정치, 경제, 행정, 교육, 언론

10) 한·미 수호통상조약은 러시아 남침과 일본의 조선침략을 견제하려는 중국의 중재아래 이루어졌으며, 제3국으로부터 침략이 있을 경우 공동방위, 치외법권이 잠정적이라는 규정, 거류지는 조선의 영토라는 점, 양국 간 문화학술 교류에 대한 규정 등 주권국가의 쌍무적 협약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하지만 미국은 일본, 중국, 러시아가 한반도에서 각축전을 벌였을 때, 한국의 중재 요청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경제적인 측면만을 고려하여 정치적 중립 자세를 취했다. 그러나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이후에는 극동의 세력균형을 추진한다며, 일본의 역할을 강조했고 오히려 러시아의 팽창을 막기 위해서 일본이 한국을 통치해도 좋다는 정치적 변화를 보였다.

제도를 미국식으로 개편해 나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동북아 안보전략에서 ‘한국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고, 그 귀결이 1949년 철군정책과 1950년 1월 에치슨 라인(Acheson Line)<sup>11)</sup>이다. 이것은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이 한반도를 극동 방어선에서 제외한다는 착각을 불러일으켰고 한국 전쟁을 촉발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한국전쟁 후 한국은 미국과 동맹 체제를 수립하게 되는데, 그것의 첫 단계가 한·미 방호 수호조약이다. 1950년 10월 중공군의 개입과 함께 38선 근처에서 전선이 고착됨에 따라 미국은 한국전쟁을 군사적 방법이 아닌 정치적 협상을 통해 종결시키고자 하였다. 하지만 미국 측의 움직임에 한국 측이 강력히 반발하고, 또한 한반도에서의 공산주의 봉쇄를 위해 미국은 휴전협정과 함께 1953년 10월 한국 방어를 명시한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게 된다. 결국 한·미 동맹체제는 동북아에서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세력의 팽창을 봉쇄하려는 미국의 이익과 북한의 위협 및 남침 야욕을 저지하려는 한국의 이익이 일치하면서 타결된다. 하지만 조약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미국의 정책선택 폭과 여지를 넓혀준 반면 한국 으로서는 미국의 결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불공정한 내용이었고, 이러한 불공정한 관계는 미군 주둔에 따른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이나 한·미 연합군 사령부에서의 지휘권 문제에서도 그대로 재현되었다.

박정희 정부에 들어서면서 한미관계는 약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박정희 정부 초기만 하더라도 1950년대의 분위기가 팽배하여 대미 추종적 결탁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또한 정부주도형 경제발전에 매진하던 시기라 여전히 대미 종속적 위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정경환, 2004). 하지만 1969년 7월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팜독트릭을 발표하고 주한미군을 부분적이지만 철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박정희 정부는 미국에 대한 종속적 관계에서 벗어나 자주국방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박정희 정부는 1970년 8월에 국방과학연구소를 설립하여 국방기술의 현대화와 국산화에 박차를 가하고, 자주국방을 위한 방위산업에 착수하게 된다. 그리고 1978년 9월에 이르러 장거리대미사일의 개발에 성공하게 된다. 이러한 박정희 정부의 독자적인 안보노선은 한국이라는 지역을 모스크바-북경-평양을 잇는 북방3각관계에 대응하는 대응축의 하나(워싱턴-동경-서울)로 삼으려는 미국의 세계전략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박정희 정부 후반기에 미국과 긴장 내지 갈등관계에 놓이게 된다.

1980년대에 이르러 한·미관계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과거에 미국이 한국문제의 해결사 역할을 했다면, 1980년대 이후 미국은 복잡한 한국문제의 원인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때 군대 투입에 미국이 얼마만큼 동의했느냐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1980년 전두환 정부가 집권한 후 미국은 전두환 정권을 지지해 주었고,

11) 6·25전쟁 발발 직전인 1950년 1월 12일 미국 프레스 센터에서 미국 국무장관 D. G. 에치슨이 발표한 극동에서의 미국의 방위선 구상. 그 내용은 스탈린과 마오쩌둥(毛澤東)의 영토적 야심을 저지하기 위하여 미국의 극동방위선을 알류산 열도-일본-오키나와(沖繩)-필리핀을 잇는 선으로 정하며, 타이완, 한국, 인도차이나 반도와 인도네시아 등은 이 방위선에 포함되지 않고 그들 지역들은 국제연합(UN)의 보호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군사독재 정권과 미국의 관계를 목격하면서 이후 국내에서 반미투쟁은 가열되어 갔다. 1982년 3월 18일 부산 고신대 학생들이 광주민주화운동 유혈진압 및 독재정권 비호에 대한 미국 측의 책임을 물어 부산 미문화원을 방화한 사건이 일어났고, 1985년 5월에는 광주학살의 진상규명과 원흉처단을 내세우고 파쇼문제와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미국의 문제를 동시에 공격한 서울 미문화원 점거농성이 일어났다. 즉,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을 계기로 1970년대까지 우리 사회를 지배하던 친미적 세계관이 붕괴되기 시작했고(최장집 외, 1989),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미관계에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한미관계의 변화에는 사회주의권의 붕괴에 따른 냉전 종결이라는 시대적 상황이 작용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은 세계전략과 동아시아전략을 새롭게 재조정하고, 한국 역시 탈냉전, 민주화시대에 걸맞게 새로운 한미동맹 및 한반도 평화를 구상하게 된다(구갑우, 2012). 이에 따라 김영삼 정부는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고, 김대중 정부는 주한미군을 신속기동군화하는 협상을 전개한다. 또한 노무현 정부는 주한미군의 재배치, 용산기지의 이전, 주한미군의 병력감축, 북핵문제, 이라크 파병, 방위비 분담협상,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 한미동맹의 유지 또는 강화와 한국의 정치적 자율성을 제고하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였고, 그러한 가운데 2012년 4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합의하게 된다.

이명박 정부 들어 한미관계는 동맹 강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의 길을 모색하고자 하였고, 그 귀결이 2008년 4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진 21세기 전략동맹이다. 이 전략동맹은 한미가 서로의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가치동맹, 군사동맹은 물론 경제, 사회, 문화를 포괄하는 신뢰동맹, 동아시아 지역 및 세계적 차원에서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평화구축동맹 등 3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전략동맹의 차원에서 2006년 2월 3일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공식 출범하게 된다. 2009년 6월 한미는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에 합의하고, 그 결과 한반도에서 대북 억제력을 확보하기 가능했던 한미동맹이 전 세계 차원의 문제를 다루게 되면서 한미동맹의 이해관계와 정체성이 변하게 되었다(구갑우, 2012).

그러나 한미 전략동맹 이후 한반도의 평화는 오히려 악화되었다. 2010년 3월 천안함 사건 이후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 문제가 연기되고, 한반도의 동해와 서해에서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실시, 북한과 중국의 정상회담 개최,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훈련에서의 한미뿐만 아니라 일본의 참여, 한미 미사일방어체계(MD) 협력 강화 발표, 연평도 해전 등 한미 대 북중의 대립구조가 극으로 치달아 갔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2011년 10월 한미는 한미 FTA를 비준하면서 기존의 안보동맹에 경제동맹을 추가한 새로운 형태의 다원적 한미동맹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이상과 같이 한미관계는 혈맹관계에서 유연적 관계로 다시 전략적 동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한미관계의 변화에는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의 부상

다른 미국의 세계전략의 변화와 관련이 깊다. 미국은 동북아 지역에서 군사적, 경제적으로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 아시아, 태평양으로의 복귀를 선언하였고, 한국은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전략에서 미국의 동맹 파트너로서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미동맹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면, 한반도 평화라는 궁극의 목표를 위협할 수 있는 동맹의 전환이 한국의 이익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심각하게 제고해 보아야 한다.

### 3. 한·중 관계 : 중국은 한국의 동반자가 될 수 있는가?

역사적, 문화적, 지리적 요인으로 한국과 중국은 오랫동안 긴요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중국의 문명은 조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고, 또한 조선이 근대 초기 서양 열강의 침략을 받았을 때도, 그리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을 때에도 조선의 우방국으로서 그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1950년 한국전의 발발과 중공군의 전쟁참전은 오랫동안 유지해 왔던 한·중 관계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6·25 전쟁이 끝난 후 1953년 이승만 정부는 중국과의 국교를 단절하고, 대만의 장제스와 정상회담을 갖고 아시아에서 반공주의 연대를 해 나갈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1963년 출범한 박정희 정부는 1965년 한·일 협정을 비준하여 일본과의 관계정상화를 시도하였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여전히 적대시하였다. 하지만 1970년대 들어 한·중 관계에서도 차츰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1972년 2월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변화하기 시작했고, 곧이어 1972년 9월에는 일본이 중국과 국교를 수립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역시 중국과 공식적인 수교를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1970년대 말부터 양국에서 간접교역의 형식으로 경제 교류가 시작된다(유용태, 2012). 1980년대 들어서 중국의 개혁·개방 확대로 한·중 경제교류가 활기를 띠기 시작했으며, 중국 민항기가 춘천에 불시착하는 사건(1983년 5월)을 계기로, 중국 민항기가 한국의 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합의가 이루어지면서(1983년 8월), 이후 중국 거주 한국인들의 모국 방문과 한국인의 중국 친지방문이 허용되었다(1984년 3월).

1990년대 들어 한·중 관계는 노태우 정부의 북방외교와 맞물려 급물살을 타게 된다(서진영, 2012). 1990년 10월 20일에 한·중 간에 무역대표사무소가 개설되고, 1991년 1·2차 한·중 외무장관 회담에 이어 1992년에는 양국 무역협정이, 1992년 8월 24일에는 양국이 마침내 수교의정서를 교환하고 정식으로 수교를 맺게 된다. 1992년 9월 27일 노태우 대통령은 중국을 방문해 양상쿤(楊尙昆) 국가주석, 리펑(李鵬) 총리, 장쩌민(江澤民) 총서기와 회담을 갖고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대한 세계지원과 중국의 8차 5개년 계획에 한국기업의 참여를 요청하였다. 1994년 3월에는 김영삼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여 북한 핵문제의 대화를 통한 해결과 긴밀한 협의, 한반도 비핵화 실현지지를 논의하고 이중과세 방지협정 및 문화협정을 체결하고 통신협력양해각서를 교환하였으며, 산업협력위원회를 설치할 것

을 합의하였다. 1995년 11월에는 중국의 국가 원수로서 장쩌민 국가주석이 처음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하여 김영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은 지리적 인접성, 문화적 유사성이라는 튼튼한 기초 위에서 평화공존의 원칙에 입각해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1998년 11월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여 주룽지(朱鎔基) 총리, 리펑(李鵬) 전 인대상무위원장,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회담을 갖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확대 다자회담과 당사자 간 해결 원칙을 놓고 다소 입장 차이를 보이기는 했으나 한·중 관계를 ‘전면적인 협력동반자 시대’로 격상시키기로 합의하였다(서진영, 2012). 그리고 구체적으로 10개 협력 사업을 지정하여 협력해 나가기로 하고, 이 밖에도 조약과 협정, 양해각서를 중국 측에 제안하여 합의하였다. 그러나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돼 구급중인 석재현씨 석방과 타이완 문제,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 방안 문제 등 양국 쟁점현안에는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2000년대에 들어서 한·중 관계는 정치·안보 차원에서 기대이상의 관계발전을 이룩하였다. 2001년부터는 해군 함정 교환방문이 이루어졌고, 2003년에는 중국 공군기의 한국 기항도 성사되었다. 2003년 7월 노무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여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협력동반자관계’로부터 안보차원에서 협력 가능한 ‘전면적 협력동반자관계’에로 확대시키기로 합의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공동성명에서 한·중 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 및 비핵화 실현을 위해 대화를 통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논의했으며 한국은 대만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2002년 10월 미 국무성 케리 차관보의 방북을 계기로 북한의 핵개발 문제가 다시 국제사회에 제기되었으며, 12월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중유공급 중단을 선언하면서 이듬해 1월 북한이 NPT 탈퇴선언을 발표함으로써 제2차 북핵위기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4월 중국이 중개를 하여 북경에서 미국, 북한, 중국의 북핵 3자회담이 개최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중 양국 정상이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과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에 합의한 것은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양국 간의 협력의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고, 그 후 8월 북경에서 남북한이 모두 참석한 제1차 북핵 6자회담이 개최되게 된다. 2005년 11월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한국을 공식 방문하여 노무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등 제 영역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고,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ASEAN+3, 한·중·일 3국 협력,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세안지역포럼(ARF),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APEC), 아시아-유럽 회합(ASEM) 등 지역 협력에 있어서도 긴밀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2006년 10월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두 번째 공식 방문하였고, 다시 2007년 4월에는 원자바오 총리의 방한 등 양국 지도부 간의 상호 방문이 정례화되었으며, 2007년을 ‘한중 우호의 해’로 선포하였다. 2008년 5월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후 중국을 방문하였으며, 후진타오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에서 양국 관계를 ‘전면적 협력동반자관계’로부터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합의하였다. 2008년 북경 올림픽 폐회 직후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한국을 답방하여,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의 발전방향을 정치 분야, 경제 분야, 인적 및 문화 교류, 지역 및 국제 협력 등 크게 네 가지 분야 34개 항목으로 명시하였다.

이상과 같이 한·중 관계는 냉전 체제 종식 이후 선린우호 관계에서 협력적 동반자 관계, 전면적 협력동반자관계를 거쳐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발전하였다. 한·중 관계가 이렇듯 급진전한 배경은 중국의 입장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중국의 경제발전에 무엇보다 긴요했기 때문이고, 또한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과의 동맹 강화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의 입장에서 한반도의 평화 유지와 경제발전에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중국과의 협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양국 간의 관계 발전에도 불구하고, 한·중 관계에는 계속되는 무역 불균형, 역사 왜곡, 북한에 대한 불명확한 입장 등의 문제가 산적해 있다.

## VI. 결론

탈냉전시대에 한국의 대외관계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냉전시대에 적과 동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대외관계의 방향은 양극체제를 중심으로 자신의 진영이 아닌 국가와는 외교하지 않으며 자신의 진영 안에서만 수교를 이루면 되었다. 하지만 탈냉전시대에는 국제사회의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경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대외관계는 더 이상 이념이 관계 설정의 기준이 될 수 없다. 탈냉전시대에 대외 관계는 현실적, 실질적 이익이 중심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완전히 현실적 이익을 쫓을 수 없는 것은 아직까지도 한반도에 냉전이 종식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남북 대립이라는 현실적 위협이 있는 한 한반도의 대외관계는 언제나 외부 국가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또한 남북의 분단을 통해 현실적 이익을 추구하는 세력이 있는 한 분단의 종식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연구는 한국이 근대 국가로 성장하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근대 국가형성과정에서부터 현재까지의 대외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한국 근대사에서 주요하게 영향을 미쳤던 미국, 일본, 중국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근대 한국의 대외 관계는 크게 배타적, 적대적, 실리적 관계로 축약된다. 첫째 구한말 서양과의 관계에서 조선은 배타적 태도를 취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양과의 관계에서 조선이 배타적 태도를 취한 것은 중국의 영향과 이를 중요하게 여기는 구한말 위정자들의 태도에 기인한다. 서양이 조선을 직접적으로 침략하지는 않았지만, 조선은 이미 서양인의 중국 침략 과정을 목격하였고, 또한 서양인들이 조선과의 접촉 과정에서 무력행사를 서슴치 않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반도의 끝자락에 위치하면서 타 민족과의 접촉이 부재했던 조선의 입장에서 외모, 언어, 문화가 다른 서양인들은 그 자체가 생소하고 낯설었을 뿐만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의 문명권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조선이었기에 중국 문화의 맥락 속에서 서양과의 관계를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둘째 적대적 관계로 나타난 것은 주로 일본 식민지 시기의 일본과 민족 분단 이후의 북한과의 관계에서 이다. 일본의 조선 침략은 당연히 조선 민중의 저항을 불러 일으켰다. 하지만 일제 식민지 기간 내내 조선 민중이 일본에 대해 저항적인 태도를 감추지 않았던 것은 일본 민족을 타자화하는 우리라는 ‘민족’ 의식이 발현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의 대내외 민족 관계에서 적대적 관계를 보인 것은 아이러니 하게도 외부 민족이 아닌 북한이었고, 이러한 태도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일본 식민지 기간 동안에 형성된 사회주의와 자유주의를 두 축으로 하는 소련과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의 재편은 한반도의 민족 지형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되자마자 민족은 둘로 나누어지면서 분단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하나의 민족, 두 개의 국가로 분단된 민족은 적대적 이념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자기 분열적 갈등과 충돌을 반복하였다. 셋째, 산업화시대에 접어들면서 한국의 대외 민족 관계는 점차 정치가 아닌 경제의 논리가 우위를 점하게 된다. 현실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탈냉전시대에 접어들면서 더 이상 이념의 잣대로 대외 관계를 설정하기 어려워지면서 한국의 대외관계는 점차 실리적, 우호적 태도를 중시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분단이라는 현실은 한국이 대외 관계에서 완전히 정치적 논리를 배제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탈냉전시대에 한국의 대외 관계는 또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대외 관계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한국의 성장 발전을 위한 수단이라고 한다면, 미래 한국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하고, 그럴 경우에 대외 관계의 향방이 결정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 참고문헌

- 구갑우. 2012. “한미동맹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한반도포커스』17, 2-6.
- 김기주. 1989. “구한말 제일 한국 유학생의 항일운동”. 『역사학연구』3, 165-205.
- 김도훈. 1993. “러일 전쟁 후 전후 일제의 조선 침략 과정: 〈한일의정서〉, 〈한일협약〉을 중심으로”. 『순국』25, 106-115.
- 김연철. 2010.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의 남북관계”. 『기억과 전망』22, 109-140.
- 김창근. 2007. “남북관계 변화와 한반도 평화”. 『인문사회과학연구』16, 101-139.
- 김호섭. 2005. “노무현 정권 2년의 대일 외교정책의 평가와 전망”. 『한국정치논총』45(2), 81-101.
- 김호일. 1989. “1930년대 항일학생운동 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3, 411-444.
- 도진순. 2001. 『분단의 내일 통일의 역사』. 당대.
- 박명규. 2000. “한국전쟁과 민족주의”. 『아시아문화』16, 57-95.
- 박인규. 1989. “해방과 분단의 과정과 의미”. 『정경론집』23, 7-21.
- 박천홍. 2010. 『악령이 출몰하던 조선의 바다』, 현실문화.
- 신명호. 2009. “을미사변 후 고종의 국모복수와 군주전제론”. 『동북아문화연구』19, 5-22.
- 서중석. 2010. 『지배자의 국가, 민중의 나라』, 돌베개
- 서진영. 2012. “한중관계20년: 회고와 전망”. 『국방정책연구』28(1), 9-43.
- 우승지. 2008. “남북한 관계 60년 분석: 1948-2008”. 『국제지역연구』17(2), 121-156.
- 유용태. 2012. “중국의 지연된 근대외교와 한중관계”. 『한중인문학연구』37, 1-33.
- 유준기. 2000. “근대 항일운동과 민족정기”. 『2000년』 241, 10-15.
- 윤대엽. 2010. “건국의 정치와 미군정: 건국헌법 농지개혁 조항의 규범적 기원과 정치적 현실”. 『사회과학논집』41(1), 125-161.
- 윤대원. 2009. “임시정부법통론의 역사적 연원과 의미”. 『역사교육』110, 103-135.
- 윤덕영. 2011. “신간회 창립 주도세력과 민족주의 세력의 정치 지형”. 『한국민족운동사연구』68, 79-128.
- 윤진표. 2003. “한국 역대 정권의 대 일본 정책 비교”. 『연구논문집』38, 95-121.
- 이강수. 2003. “해방 직후 남·북한의 친일과 숙청 논의 연구”. 『역사학연구』20, 23-50.
- 이동우. 1995. “을미 의병봉기의 역사적 배경”. 『사학연구』 49, 145-176.
- 이성일. 2010. “중국의 한반도정책과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의미: 중국 측 시각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49(1), 185-224.
- 이현주. 1999. “국내 임시정부 수립운동과 사회주의 세력의 형성(199101923): 서울과,

상해파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 정대성. 2003. “제2공화국 對日외교의 전개과정 연구: 장면 민주당 정부의 재평가와 관련하여”. 『한국민족운동사연구』34, 213-238.
- 정병준. 1993. “1946-1947년 좌우합작운동의 전개과정과 성격변화”. 『한국사론』 29, 249-305.
- 조정규. 1999. “갑오개혁의 개혁내용과 주체 세력의 분석”. 『한국동북아논총』12, 299-322.
- 진창수. 2002. “일본의 정치적인 변화와 한일관계”. 『동아시아연구논총』13, 317-329.
- 탄홍메이. 2010.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검토적 연구: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의 비교”. 『글로벌정치연구』3(1), 93-115.
- 최장집 · 서중석 · 이종범 · 조희연 · 김민석. 1989. “광주항쟁이 역사적 성격과 80년대의 반미자주화투쟁”. 『역사비평』5, 47-75.
- 황지환. 2010. “이명박 정부의 남북관계와 새로운 대북정책의 모색”. 『공공정책연구』 17(2), 27-56.